

금강살리기 사업의 과제와 추진전략

허재영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 서론

금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부족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며, 수상레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하천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도 논란이 거세다. 특히 수질이나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측은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경고하고 있고, 정부는 4대강이 생명의 강으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4대강 사업, 그중에서도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금강사업에 대한 찬반논쟁을 긍정적이고 해결지향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논점을 정리해보자 한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 외에 다른 중요한 주제도 있을 수 있지만, 주제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홍수 경감의 필요성

2.1 하천의 개수율

하천은 홍수를 배제하는 주요수단이기 때문에, 홍수피해는 주로 하천과 그 인접구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하천 정비는 하천주변이 이미 도시화되거나 경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정비의 방향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전체개수율(기개수구간의 연장을 요개수구간의 연장으로 나눈 값)이 96.3%(금강의 경우 94.01%)이고, 지방1급하천의 경우 91.92%(금강의 경우 96.86%), 지방2급하천의 경우 78.16%(금강의 경우 81.91%)로서, 지방2급하천의 개수율이 국가하천의 개수율보다 낮기 때문에 지방하천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완전개수율(완전개수구간의 연장을 요개수구간의 연장으로 나눈 값)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개수율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이 경우에도 또한 지방하천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소하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우리나라 소하천의 전체 개수율은 2008년말 현재 38.9%이고, 충남의 경우 이보다 약간 낮은 36.0%에 지나지 않는다. 하천정비율은 하천정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천정비는 하천을 1차원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공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천의 본류구간은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계류(溪流)로부터 시작하여 소하천, 지방하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본류를 정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역전체의 치수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하천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하천의 정비는 소하천부터 시작하거나 적어도 국가하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류하천을 정비하기 전에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을 정비하면, 본류하천에 큰 홍수가 발생할 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홍수량 전체를 본류의 하천제방으로만 감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하천 등 지류하천의 홍수분담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2.2 하천재해의 실태

하천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범람원 등을 개발하여 산업용지, 농업용지 또는 택지화하였기 때문에,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수량이 전부 하천에 집중되고 하천은 이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천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이 감당하는 홍수량을 경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매년 되풀이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 또한, 복구비용이 피해액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도 각종 통계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정비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주장도 옳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제방에 의하여 홍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가용한 토지의 절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애 따른 토지이용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하천에 제방을 쌓고 모든 홍수를 하천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속적인 하천제방을 중심으로 한 치수방식이 채택되어 상류의 과도한 제방축조로 인해 침투홍수량이 커지고, 하천 주변의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방의 증축이 반복됨에 따라 홍수량이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하류에 집중되어 홍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바탕을 두고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치수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는 줄어들었으나 홍수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존의 치수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천피해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피해규모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피해액을 전부 합한 것과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2006년보다 2007년의 경우가 더욱 도드라지는데, 금강의 경우 2006년도의 경우 11.7%(하천 피해) 대 21.0%(소하천 피해)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2.7% 대 8.7%로 되어 오히려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소하천의 정비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강 사업에서 소하천 살리기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소하천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제방정비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상류지역의 범람원을 회복하여 습지면적을 늘리고, 유수지 등을 정비하여 생태계의 복원을 도모하면서 본류하천에 홍수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2년 태풍 루사 이후에 치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치수사업개선방안(2004, 건교부)에 의하면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 등은 댐건설보다 민원발생 및 환경문제에서 유리한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고자 하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건교부)에서는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

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3. 물 부족의 완화

3.1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6)

2020년까지는 지역별로는 수자원 부족량이 나타나지만, 수계 단위로 보면 모자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즉,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배에 의해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는 수자원부족이 예상된다.

농업용저수지는 2005년말 현재 17,699개로서 2,789,736천 m^3 의 유효저수량을 갖고 있다(충남의 경우 농업용저수지는 947개로서 365,078천 m^3). 그러나, 저수량 10만 m^3 미만의 소형저수지가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뭄에 대해 매우 취약하며, 농업용수 외의 용수공급실적은 미미하다. 또한 저수지의 50%이상이 축조한지 50년이상 경과되어 재해에 대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농업기반시설정비연보, 2006, 농촌공사).

3.2 예측치와 실사용량의 비교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자원부존량(확보량)과 실제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최근의 수자원확보량 및 수요량에 관한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므로, 이 보고서상의 예측치와 실제 사용량(공급량)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합한 것인데, 이 중 공업용수는 대부분 생활용수에 포함되고,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는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서 예측한 양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물 부족량을 판단해보기로 한다.

생활용수는 계측이 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정확한 실측자료이며, 이것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2008년도 상수도통계(상수도보급율 92.7%)에 따르면 전국의 상수도 시설용량 103억4천1백

만³/년(28,332천³/일)임에 비해, 직접급수량은 57억5천5백만³/년(15,766천³/일)에 지나지 않아서, 시설용량 대비 55.6%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전국의 생활용수 수요예측량은 78억7천7백만³/년(2006년 기준수요)로서 2008년 직접급수량은 수요예측치의 73.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생활용수의 과다 예측분이 21억2천2백만³/년(상수도 보급률이 92.7%임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다소 적을 것임)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양은 최대가뭄년에 전체 예상부족량 9억2천5백만³/년을 충당하고도 남는 양으로서 실제로는 용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금강 인근지역(대전, 충남, 충북, 전북)의 상황을 보면, 상수도 시설용량 713백만³/년(1,953천³/일), 직접급수량 802백만³/년(2196천³/일)이고, 금강권역의 상수도 수요예측량(수장기 2006~2020)은 1,156백만³/년 수요예측량과 직접급수량과의 차이 354백만³/년은 금강권역의 전체 용수부족 예상량(수장기 2006~2020)이 최대가뭄시 73백만³/년을 충당하고 약 280백만³/년의 여유가 생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3 용수확보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사항

〈표 1〉은 상수도 공급량을 분석한 자료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예상 최대 용수부족량은 925백만³/년(지역별) 및 439백만³/년(전국)이며,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누수량은 709백만³/년(전국)로서, 2020년 전국단위의 용수부족 예측량보다 누수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누수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상당한 수자원량의 추가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용수량의 추가확보를 계획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4. 금강 하구둑의 개선

하구(estuary)란 하천과 바다와의 접점으로서, 육지로부터 유출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수역을 말하는데, 하천 내에서 조위의 영향을 받는 구간을 감조구간(tidal reach)이라 한다.

하구는 하천유역에서 생산된 토사를 수송해 와서 해역으로 전달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하며, 하천수의 영향으로 해수의 염분농도가 낮아져서 하구역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4.1 금강하구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금강하구둑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은 수질, 하구둑 주변의 하상지형변화, 해안생태계 및 하천생태계의 차단 등이라 할 수 있다.

1) 수질의 문제

하구둑은 하천의 흐름을 독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수질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BOD의 경우 금강하구둑 부근의 수질이 현저히 나빠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천수질기준으로 본다면 Ⅲ등급정도이며, 공주나 부여의 수질이 Ⅱ등급~Ⅲ등급임에 반해,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OD의 경우, 호소수질 기준으로 본다면 금강본류와 하구호 모두 Ⅳ등급 수준이며, 특히 금강하구호의 수질은 뚜렷한 악화를 보이고 있다.

T-N과 T-P는 하구호가 본류에 비해 특별히 나쁘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하구둑 주변의 하상지형변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간한 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하구둑 건설이전에는 외해에서 수심이 작고, 군산외항쪽(즉, 하구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지만, 하구둑 건설이후에는 외해의 수심이 크고, 군산외항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군산외항으로부터 군산내항 부근까지의 수심은 이와 반대로 내항부근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군산외항쪽에서는 도류제 건설로 인한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군산내항쪽(하구둑쪽)에서는 금강상류 60km까지 영향을 미치던 조류가 하구둑에 의해 차단되어 창조류(밀물)시에 외해에서 유입된 토사의 일부가 퇴적되어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구호내에서도 연간 80만톤 정도의 퇴적이 발생하고 있다.

〈표 1〉 상수도 공급량 중 누수량(2008 상수도통계, 2009, 환경부)

연도별 상수도 총급수량 분석 추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급수량 (백만㎥)	5,840	5,798	5,812	5,791	5,696	5,723	5,909	6,002	5,749	5,747	5,804
유수수량 (백만㎥)	4,129	4,258	4,342	4,367	4,395	4,489	4,633	4,761	4,601	4,659	4,744
유수율 (%)	70.7	73.4	74.7	75.4	77.2	78.4	78.4	79.3	80.0	81.1	81.7
누수량 (백만㎥)	1,056	934	859	804	700	781	839	845	819	734	709
누수율 (%)	18.1	16.1	14.8	13.9	12.3	13.6	14.2	14.1	14.2	12.8	12.2

3) 금강 하구호의 물이용

새만금지구의 담수호에 공급하기 위한 희석수를 금강하구호로부터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또한 전북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은 1차적으로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의 유입수질의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 또한, 금강하구호의 수질도 희석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금강 하구호의 물을 새만금으로 보내는 일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4.2 하구 생태계에 대한 인식변화

하구역은 해수와 담수의 혼합정도에 따라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또한, 하구로부터 상류로 갈수록 염분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류에서 상류로 종방향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며, 이것이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게 한다.

하구둑은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며, 용수문제로 불가피하게 하구를 막았지만,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하구둑의 전부 또는 부분적 개방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즉, 하구둑 부분 개방의 문제는 철학적인 가치기준을 세운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활환경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인문학적 및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필요한 것이다. 주제발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Robert Costanza et al.의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라는 논문(Nature 387, 1997)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미적 가치 등은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 실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금강하구둑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의 근거가 되었던 경제적 가치가 지금에 와서는 다른 의미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을 보면 경제적 가치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모든 계획은 좀 더 궁극적인 가치 또는 철학적 가치를 근거에 두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3 타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전라북도의 경우, 수질개선은 금강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제어와 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하수도 보급률이 2007년 현재 전북의 경우 74.7%, 충남의 경우 59.0%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1990년도에 완공된 금강 하구호는 긴 기간동안 염분이 제거되어 담수호로 되기 까지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과 시간이 투자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사장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기수역이 발생함에 따라 취수원을 옮겨야 하는 것과, 지금까지 연간 3억 6천톤의 용수를 공급해 왔는데, 이만한 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

4.4 금강하구둑의 개선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

금강하구호를 기수화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다. 그러나 용수원확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하구둑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하구둑의 일부를 개방하여도 이러한 목적, 즉 용수원확보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1) 취수원의 이동을 포함하여 용수원 확보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충분한 용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담수역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수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수역의 범위에 맞도록 수문의 개방고를 엄격하게 산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간에 합의가 가능한 설득력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금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금강하구호의 수질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하구역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구둑 개방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공사비에 관한 경제적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지역의견수렴

금강에 접해있는 지역내 주민들은 금강으로부터 이수, 관광, 조망 등 유무형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홍수재해의 경우 피해를 입는 등 금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금강의 대대적인 정비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유역내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금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구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하천정비사업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사업을 단시간에 추진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4대강(금강)사업은 추진절차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갈등이 가중되는 것이다.

지난 9월초 4대강(금강)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구성된 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금강)사업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들이 피해상황, 기대사업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강에 인접한 7개 시군(금산군,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

여군, 서천군)의 주민들과의 4대강(금강)사업 관련 지역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개최 결과 4대강(금강)정비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충남 7개 시군의 주민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국가(국책)사업이므로 반대하기는 곤란하다. ② 하상에 묻혀있는 쓰레기가 많으므로 하상의 정리(청소)가 필요하며, 이것이 수질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다. ③ 보는 지역내의 빈약한 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을 기대한다. ④ 하천공사에 따른 지역내 건설업체 수주확대 등을 통한 자금유입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 ⑤ 금강하구둑의 개선이 필요하다(논산~서천). ⑥ 농경지리모델링(부여, 청양)은 도움이 된다. ⑦ 소하천의 정비가 시급하다. ⑧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하상의 정리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보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금강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실제로는 크게 도움 되지 않다는 의견 정도가 금강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

또한, 금강하구둑의 개선방안이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한 공청회 및 지자체간 의견조율을 조기에 착수할 것을 금강 하류지역(논산, 청양, 부여, 서천)에서 공통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번 지역 간담회 결과가 지역의 의견 전체를 대표했다고 단정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잘 알고 있고, 4대강(금강)사업을 찬성했던 주민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전체 지역민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하는 목적과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원하는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주민들이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이유는 보가 건설되면 그곳이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되는 4대강사업의 결과가 과연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금강사업이 지역에 도움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존중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식 하천관리가 가능했던 것은 수자원이나 하천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면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과 기능만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천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주도의 민주적인 하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면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4대강(금강)사업의 추진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추진방향

금강사업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부분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사업의 진척정도가 사업의 정당성의 근거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본문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그 외 수질 및 생태계, 지역경제영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강과 금강 유역 및 지역주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면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래의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충남도의 4대강(금강)재검토특별위원회는 금강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금강사업을 일시 중지(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금강 사업의 전체공정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하고,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금강살리기 사업을 위한 기본구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충남도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성공적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방식이 하천관리 도입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본 원고는 충남발전연구원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